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재외동포청 축 인천설치 확정!
		배포일자	2023년 5월 11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 감염병정책팀장 이희용 ☎440-7801 • 담당자 이현희 ☎440-780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6.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일상적 감염관리체계로 전환
- WHO·정부 대응 조정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 수립해 3단계 대응 -
- 공공의료→민간의료 전환, 격리기간 권고, 상시적 관리 -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이 오는 6월 1일부터 일상적 감염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2020년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며, 5월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유행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

고, 백신 접종 및 치료제 투약 효과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또, 최근 한 달간 일일 확진자가 1천 명 내외를 유지 중이어서 향후 산발적 유행과 등락에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외래·병상, 백신·치료제 등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도 확보된 만큼 일상적 감염관리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일상적 감염관리체계로 전환하고, 1~3단계까지 나눠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준비^(23.6.1시행예정))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운영하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트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2단계(감염병 등급 2→4등급 조정)에서는 방역대책반이 중심이 돼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진료 가능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할 예정이다.

3단계(상시적 감염병 관리단계 전환)에서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체계로 완전히 전환돼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을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보건소 중심의 공공 검사체계로 진행하던 것을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검사·진단·투약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택 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운영을 종료하고 별도 절차 없이 대면 진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운영도 바뀌어 1단계로 병상수는 전담병상 48병상, 특수병상(소아·분만 등) 9병상으로 조정한다. 2단계로는 지정병상 운영 및 배정을 종료하고 자율 입원을 위한 271병상을 운영한다. 또, 긴급 병상 배정을 제외한 모든 환자의 치료는 외래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자율 입원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둘째, 감염취약시설 보호 및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집단 감염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를 갖추고,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중증 최소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독려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방역 조치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고, 관리 수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1단계로 7일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며, 마스크는 향후 의무착용 없이 모든 장소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또, 확진자 감시체계는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되면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되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 코로나19 양성자 중심의 新감시체계 한시운영’ 이후 호흡기통합감시체계로 편입하여

확진자 전수 및 변이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넷째, 코로나19 지원체계도 변경된다. 격리기간 내 입원 치료비(본인 부담금)를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지원하되, 향후에는 중증환자(인공호흡기 등) 치료비만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감염취약시설 및 선별진료소 방역물자도 향후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대응 3단계 이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시체계 강화,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 확대, 선제적 의료 대응 준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대응체계를 즉시 재가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해제했지만,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관문 도시로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위험이 높은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며,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